“미쳤다” “제 정신 아니다” “최후의 발악” 맹폭

●대통령 담화 광주·전남국회의원 반응

박지원 “미치광이에게 군 통수권 1초라도 맡길 수 없어”
이개호 “정신건강 위해 방송화면 얼굴 내보내지 말아야”
신정훈 “위험한 시험폭탄, 민주주의 위해 당장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미쳤다”는 표현을 쓰며 즉각적인 탄핵과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적었다.

이개호 의원은 “제정신이 아닌 자에게 한 때 나라를 맡겼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억울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방송 화면에 이 자의 얼굴을 다시는 내보내지 않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미치광이에게 1분1초도 위험한 시험폭탄”이라며 “단 1초도 더 이상 미치광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병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위험한 내란 수괴 범죄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수본은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미치광이 윤석열, 최후의 발악”이라며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국무위원 등 계엄 가담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수사 대비해 입 맞추라는 주문이다”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은 “명태균이 ‘윤석열은 총을 든 5세 아이’라고 말한 이유를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촌평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이인영 의원),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정태호 의원),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장경태 의원)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탄핵만이 답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尹담화, 자신 당선된 대선시스템 자기부정”

“계엄군 선관위 청사 점거, 尹담화 통해 위헌으로 명백히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의원 5명 찬성표…‘계엄사태’ 일체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반면,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윤 대통령을 ‘거부권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진수 기자

국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된다. /김진수 기자